
국회예산정책처 관련 기사

기획협력팀

2009년 2월 16일(월)

조간 · 석간

- ... 국민일보
96조 vs 35조... 5년간 감세 규모 놓고 목소리 갈려
- ... 서울신문
96조원 vs 35조원... 국회·정부 5년간 감세규모 쟁점공방
- ... 세계일보
5년간 감세규모 싸고 논란... 정부 “35조” vs 국회예산처 “96조”
- ... 한겨레신문
“정부 5년간 감세규모, 35조원 아닌 96조원”
- ... 경향신문
정부, 감세규모 의도적 축소 의혹
[사설] 규모 축소 꿈수 동원한 부자 감세안
- ... KBS
“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 원”
- ... MBC
“정부 감세 규모, 5년간 96조 원”
- ... MBN
“세계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 96조 원”
- ... 연합뉴스
“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원”



엇갈리는 세제개편안 세수감소 효과

(단위:조원)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
| 감세규모 전년대비 | 6,20 | 11,64 | 13,16 | 3,89 | 0,38 | 35,26 |
| 기준연도 대비 | 6,20 | 13,47 | 24,59 | 25,96 | 25,80 | 96,01 |

(자료: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96조 vs 35조

5년간 감세 규모 놓고 목소리 갈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간 추정치가 60조원이나 차이 나향후 감세로 인한 재정 영향 등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 감세 효과와 60조원 격차, 왜? =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8년 세제개편안 이후 2012년까지 감세 효과가 9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감세 규모 추정치인 35조3000억원과 무려 60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원인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세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전년 대비'로 계산하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

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감세 규모가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이라면 전년 대비로 계산하면 3년간 감세 규모는 1조원이다. 그러나 기준연도 방식을 적용하면 6조원으로 5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이 개정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감세 규모는 2008년

6조2000억원, 2009년 13조5000억원, 2010년 24조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으로 모두 합쳐 96조원을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은 "재정부의 감세효과 측정방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실제보다 과소 추계가 되는 단점이 있어 문제제기를 한

정부 "35조"에 국회예산처 "96조" 맞서
셈법 따라 정책 효과 달라져 파장 날을듯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 재평가되나=재정부는 전년 대비 방식 고수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나와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왔고 기준연도를 언제로 보는 게 맞는지 뚜렷한 해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로 계산할 경우 기준연도 방식보다 감세 효과는 적은 대신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나올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셈법 차이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도 재정건전성 판단에 기준연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제운용 방향 설정을 위해 우선 전년 대비 추계를 기준연도 방식으로 바꾸고 세제개편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까지 감안한 증감분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96조원 vs 35조원

국회·정부 5년간 감세규모 셈법공방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2012년까지 최소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발표보다 무려 6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계산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8년 세제 개편안의 감세효과(2008~2012년)를 35조 3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 보니 최소 96조원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2008년 기준 누적해야”

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 2000억원, 2009년 11조 6000억원, 2010년 13조 2000억원, 2011년 3조 9000억원, 2012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부의 추계는 기준연도(2008년) 대비가 아니라 단순히 전년 대비 감소폭만을 따진 것이어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하면 해마다 누적되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개별 연도의 세수 감소분만 나타나 실제 감세 규모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2008년 6조 2000억원, 2009년 13조 5000억원, 2010년 24조 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 8000억원 등 총 9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팀장 등은 “정부의 전년 대비 방식이 예산안 편성 때에는 간편하지만 여러 해에 걸친 세 수입 감소 규모가 작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와 같은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간 사전 협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적 조세지출, 세입변화 규모 추적 및 모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 “전년대비 방식으로”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이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줄곧 전년 대비 방식을 써 왔다.”면서 “현행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정부 “35조” vs 국회예산처 “96조”

5년간 감세규모 싸고 논란

정부 재정운용 등 파장 클 듯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5조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세 규모는 정부의 재정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2008~12년)를 35조3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9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2000억원, 2009년 11조6000억원, 2010년 13조2000억원, 2011년 3조9000억원, 2012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국회 이 팀장 등은 재정부가 ‘기준연도(2008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즉,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하면 5년간의 세수 감소분만 나타나 실제 감세 규모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2008년 6조2000억원, 2009년 13조5000억원, 2010년 24조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 총 9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전년 대비 방식의 감세 규모 집계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 추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각 나라의 사정에 적합한 방식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줄곧 세수효과의 경우 전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도 전년 대비 방식이 맞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제 와서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정부 5년간 감세규모, 35조원 아닌 96조원”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팀장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밝힌 감세 규모(5년간 35조원)보다 6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 팀장은 15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감세 규모(2008~2012년)를 35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 보니 최소 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팀장과 신

영임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 13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1조6천억원 △2010년 13조2천억원 △2011년 3조9천억원 △2012년 4천억원 등 5년 동안 35조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이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감세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개정된 세

법의 발효 시점 이후로 계속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전년 대비 방식으로 세수 감소 규모를 계산하면,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첫해의 세수 감소분만을 반영하게 돼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감세의 부작용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한다.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2007년) 대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3조5천억원 △2010년 24조6천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천억원 등 총 9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논문은 추산했다.

이 팀장은 “국가재정법상 5년간 세수 증감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는 감세정책에 대한 세수 효과를 전년 대비로 계산하면 감소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의회예산국에서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 있어 예측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나 개별소비세의 가산세인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수감소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minerva@hani.co.kr

정부, 감세규모 의도적 축소 의혹

국회예산처 “5년간 96조원”... 정부는 “35조원”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추정한 35조원보다 60조원 이상 많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감세규모를 추정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분으로 계산해 감세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경제분석관

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로 2012년까지 5년간 최소 96조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2000억원, 2009년 11조6000억원, 2010년 13조2000억원, 2011년 3조9000억원, 2012년 4000억원 등 35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는 전년 대비 세수 감소분으로 실제 감소분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를 대비해 세수감소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07년을 기준으로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분은 2008년 6조2000억원, 2009년 13조5000억원, 2010년 24조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 모두 96조원에 이른다.

이 팀장과 신 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전년 대비 세수감소만 보게 되면 전체 세수감소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세수입 감소 규모가 작게 계산된다”고 밝혔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규모 축소 필수 동반한 부자 감세안

정부가 논란이 큰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서 감세규모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5년간(2008~2012) 9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5년간 세수가 35조 3000억원 줄어든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가 계산해보니 정부의 발표에는 60조원 이상의 세수감소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계산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정부가 부자감세의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감세규모를 축소하는 꼼수를 썼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효과 산출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감세하기 전을 기준으로 이후 5년간 줄어드는 세금수입의 총액을 계산하지 않고, 해마다 지난해에 비해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따졌기 때문에 감세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처럼 계산하면 감세규모가 축소되는 '외국'이 불가피하고, 전체적으로 세금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나라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영 미덥지가 않다. 경제성장률은 터무니없이 부풀리더니, 감세규모는 꼼수를 써가며 줄여서 발표했다. 어떻게든 감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치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정책 밀어붙이기는 감세만이 아니다. 방송규제를 풀면 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산업연관분석도 예산정책처로부터 '근거없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세규모 축소 의혹을 계기로 정부의 '부자감세'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사업 확대로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모를 줄여서 발표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감세라면 재고해야 마땅하다. 정직하게 밝히고, 솔직하게 동의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감세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국회는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 원”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를 35조 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재정부가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감세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왔으므로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 박은주 기자

입력시간 : 2009.02.15 (10:02)

"정부 감세 규모, 5년간 96조 원"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 2008에서부터 2012년까지 35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최소 96조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PLAY

■ 신동진 앵커 2009-02-15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 96조 원"

2009년 02월 15일 08:54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앞으로 5년간 9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35조 3천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 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니 세수입 감소규모가 작게 계산됐다"며 원칙적으로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옳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2005. 매경인터넷(주).

"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2008~2012년)를 35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최소 96조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감세 규모 발표와 무려 60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1조6천억원, 2010년 13조2천억원, 2011년 3조9천억원, 2012년 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재정부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도록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즉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하면 5년간의 세수 감소분만 나타나 실제 감세 규모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3조5천억원, 2010년 24조6천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 총 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년 대비 방식이 예산안 편성시 간편하지만 향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세수 변화 계산 시에는 세수입 감소 규모가 작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있으며,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와 같은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별 세목별로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간 사전 협의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적 조세지출, 세입변화규모 추적 및 모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왔기에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원칙적으로도 전년과 비교해 보는게 맞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표>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 효과
(단위:조원)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합계 |
|---------------------|------|-------|-------|-------|-------|-------|
| 전년도 대비 방식(재정부) | | | | | | |
| 총국세 | 6.20 | 11.64 | 13.16 | 3.89 | 0.38 | 35.26 |
| 영구적 | 1.83 | 9.60 | 10.64 | 3.35 | 0.09 | 25.51 |
| 일시적 | 4.37 | 2.04 | 2.52 | 0.54 | 0.29 | 9.75 |
| 기준연도 대비 방식(국회예산정책처) | | | | | | |
| 총국세 | 6.20 | 13.47 | 24.59 | 25.96 | 25.80 | 96.01 |
| 영구적 | 1.83 | 11.43 | 22.07 | 25.42 | 25.51 | 86.26 |
| 일시적 | 4.37 | 2.04 | 2.52 | 0.54 | 0.29 | 9.75 |

(자료:기획재정부 및 계산)

president21@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2-15 07:3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